

환경부, EPR 제도 시행 2년만에 의무량의 103% 달성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가 시행 2년만에 의무량을 초과달성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EPR 대상 16개 품목의 총재활용 실적 이 112만 4000천 톤에 달해 부과된 의무량 108만 7000천톤의 10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활용량은 제도 시행 전인 '02년에 비해 20%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TV, 냉장고 등 4개 전자제품은 권역별 회수처리 시스템을 갖추는 등 재활용 체계 정착으로 의무량을 평균 17% 초과달성했고, 합성수지 포장재(플라스틱)는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목표치의 19%를 초과달성했다. 그러나 종이팩, 금속캔, 형광등 등 7개 품목은 재활용 의무량을 밀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무량의 96%를 달성한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에 혼입배출되는 등 분리수거가 다소 미흡했고, 목표량의 88%를 재활용한 금속캔은 급등한 고철가격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처음으로 EPR 제도에 편입된 형광등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재활용율은 45% 증가했지만 분리수거량이 적어 의무량의 87%에 머물렀다.

재활용 의무량에 미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속캔 등 4개 공제조합과 1,413개 개별업체에는 모두 49억 7000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에어컨, 컴퓨터, 종이팩, 형광등 등 일부품목은 출고량 대비 재활용율이 낮고 타이어, 필름류 포장재 등은 재활용 제품 수요처와 재활용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품의 수요처를 다양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활용 기준비용을 현실화하고, 재활용 의무 면제대상 사업장을 조정하는 등 EPR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재활용 선별장을 현대화하는 등 인프라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PR 제도는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제품 또는 포장재 생산자에게 해당 폐기물의 일정량을 의무 재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재활용 부과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육상 수해쓰레기 해양유입차단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는 육상 수해쓰레기의 해양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주요 5대 강 유역에 위치한 16개 기초단체장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오거돈 해양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간담회에는 한강유역(경기 김포시, 강화군), 낙동강유역(부산 강서구, 경남 진해, 통영, 거제시), 영산강유역(전남 목포시), 금강유역(전북 군산시, 충남 서천군), 섬진강유역(전남 여수시, 경남 하동군, 남해군) 등 5대 강유역의 기초단체장과 경북 울진, 삼척시, 강원 고성군 단체장 등 16개 시장, 군수가 참석했다.

오장관은 해마다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수해쓰레기가 하천, 강, 댐 등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 막대한 해양 오염과 어획량 감소, 연안관광 산업 피해 유발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기초단체장들에게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육상수해쓰레기문제가 해양오염 및 해양사고의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해 발생시 농경지 유실과 수재민 발생문제 등에 밀려 그동안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기초단체장들은 쓰레기 차단막 설치, 인근 자치단체간 협조체제 유지, 수거 쓰레기 처리지원, 중앙정부의 소요 인력, 예산, 장비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해양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환경관리공단,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매우 높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환경신기술로 지정받은 120건의 기술이 1,068곳의 하수처리장등 환경시설에 적용된 규모가 총 1조419억원에 이르며, 이 중 대기업이 203곳에 6천456억원, 중소기업이 865곳에 3천963억원 이라고 밝혔다.

환경 신기술지정제도는 우수한 환경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시키고 환경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시작하였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신기술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공사입찰시 현장 적용실적으로 인정하고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시 신기술가점을 부여하고, 공공시설에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신기술 장려금제와 성공불제 적용, 환경기술검증비용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 시행중에 있어 2003년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신기술지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04년부터 심사기준의 점수제 도입, 신청기술의 인터넷 공개와 앞선 다른 기술과의 유사성여부조사, 시설가동상태 현장조사 실시 등 개선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신기술지정제도가 도입된지 8년만에 환경분야 기술에 대한 국가공인검증제도로서 정착단계에 있으며 우수 환경기술 개발·적용에 기여하는 등 국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판단하고, 환경신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 수요자, 평가심의위원 등 총 1,645명으로부터 추가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신기술 개발자와 수요자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05. 10. 27~10. 28일 제6회 신기술발표회를 개최할 것이며, 신기술 요약집과 설계편람 등 책자를 발간하여 지자체를 포함한 기술수요자에 배포하여 환경신기술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농업용 비닐 재활용한 인공어초 개발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는 농업용 비닐을 재활용한 인공어초인 자원순환형 폴리곤어초(이하 폴리곤어초)를 실용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2005년도 중앙어초협의회 심의에서 일반어초로 최종 선정된 폴리곤 어초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농업용 비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2000년 6월 개발에 착수하여 2002년 5월 인천광역시로부터 시험어초로 선정된 후,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해역에 투하되어 1년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효과조사를 통해 해양생물 부착도 및 어류 위집효과가 탁월함은 물론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용출실험에서도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환경친화적 소재로 입증되어 이번에 일반어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인공어초는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연안어장에 만들어 놓은 일종의 고기들의 아파트로 현재까지는 중소형의 콘크리트어초가 주종을 이루어왔으나 최근 들어 강제어초, 세라믹어초 등이 추가 개발되어 바다목장화 사업에 사용 중에 있다. 이번 실용화에 성공한 폴리곤어초는 일반 어초 중 규모가 가장 크며(400㎡/기 이상) 고기들에게는 대형 아파트가 새로이 분양되는 셈으로 이는 해역별·어종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가 시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까지 인공어초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와 강재 등은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인공어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폴리곤어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업용 비닐은 재고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인공어초로 재활용될 경우 수산자원 증대는 물론 한정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리곤어초(폴리머 콘크리트, polymer concrete)는 농업용 비닐의 주성분인 폴리에틸렌(PE)을 결합재로 황

토 등 토양성분과 배합성형한 제품임.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다시 태어나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윤성규)은 지난 7월부터 그 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연구원의 혁신작업중 핵심사안인 조직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변경하고, 또한 조직도 전면 개편했다.

지난 1월 20일 구성된 혁신선도팀(Inno-Frontier)에서 제안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국립환경연구원의 혁신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단계에 돌입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1978년 7월 보건사회부 소속의 '국립환경연구소'로 출발해 1986년 10월 현재의 연구원으로 개칭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앞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이는 '환경분야의 자연과학자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원내·외에 명확하게 하고 소속 연구원에게도 과학자라는 높은 자긍심을 갖고 실용적 우수 환경연구에 경쟁적으로 몰입케 하는 동기를 부여해 연구원의 역량과 연구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 하기위해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원은 1978년 창설 이래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 연구조직형태를 견지해왔으나 이들 매체들은 서로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있어 한쪽의 환경부담 경감은 다른 쪽의 부담증가로 전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통합적(Integrated) 연구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자원순환연구부'를 비롯한 기존의 5개 연구부는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① '환경진단연구부', ② '환경보건안전부', ③ '자연생태부', ④ '환경총량관리연구부', ⑤ '환경측정기준부'로 재편됨으로서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다매체적(Multi-media) 환경연구가 가능해져 오염이 환경매체를 오가는 오염의 전가현상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정책 대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직제 개편을 통해 새집중후군 등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실내공기질문제 등을 다루는 정규조직인 '실내환경과'를 신설하는 등 환경보건연구기능에 연구역량을 집중시키는 한편, 대기총량제, 수질총량제 등의 업무를 일원적으로 다루는 '환경총량관리연구부', 환경측정·시험검사·정도관리 연구를 전담하는 '환경측정기준부'를 신설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연구역량의 효과적 활용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직제를 개편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황사등 장거리이동오염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구환경연구소'를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의 독립연구소로 신설하여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구차원의 환경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

환경실천연합회, 우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측정 후 인증 방식 제안

불량우수처리시설 근절을 위해 환경부와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의 지속적인 계몽/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량우수처리시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태의 한 가지 원인으로는 출고하는 제품에 대해서 등록 할 당시 성능 및 재질검사를 수행하지만 등록 이후 출고되는 제품들은 특별한 제재가 없이 제조되기 때문에 불량제품이 다량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불량 우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의 제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환실련, 관할 지자체 및 한국전자시험연구원 등과 2004년 9월부터 3회의 특별 단속을 실시, 불량제품 제조업체 95회, 판매업소 73회를 각각 적발한 실적이 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두께기준에 미달한 FRP 제품이 75%, 처리용량이나 제조자명 등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 20%, 보강링을 설치하지 않는 등 구조와 규격에 미달한 제품 5%의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조업체의 단속도 완성품과 제조 중인 제품을 구분하기가 애매할 뿐 아니라 제조일자 등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집중단속을 피해 불량제품을 산속이나 항만 야적장에 숨겨 놓는 사례가 잇달아 발견되고 있어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불량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환실련에서는 지난 6월 전국 80여개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에 설문조사한 결과, 제조업체의 80%가 제조가의 50%로 덤핑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판매상의 요구 24%, 특정업체의 고의적인 저가제품 생산 35% 등을 꼽았다. 그리고 저가불량제품의 근절방안으로는 협회 등 제3기관의 품질개선 유도가 48%, 강력한 단속을 26%로 꼽았다.

이에, 환실련에서는 상기와 같은 저가불량제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품이 출고되는 시점에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측정하여 인증하는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위 인증제도는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현장검사와 각종 사항을 종합검토한 후 등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제조사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 측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등록평가를 통과한 업체에서 출고되는 제품을 측정요원이 직접 제조현장에서 두께 및 규격 등을 측정하여 측정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인증마크와 측정확인서를 부여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경기 김포시에 소재한 B산업(대표:

서원애)과 경북 영천시의 K산업(대표: 김담곤)이 이러한 절차로 품질인증을 득한 후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업계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건교부, 합리적인 댐 수위 조절방안 도입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홍수, 가뭄, 상·하류간 물분쟁 등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자원 정책혁신T/F(팀장: 수자원개발과장)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첫 성과로서 홍수기 댐 수위 조절방법을 개선키로 하고 금년 여름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댐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가득차게 되고 이때 추가 강우에 대비하여 댐 수위를 일정수위(이를 “제한수위”라 함) 이하로 비워 놓아야 홍수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용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댐마다 제한수위를 정하고 이를 홍수조절의 기준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는 홍수조절공간의 확보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홍수기 초에는 제한수위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홍수조절용량을 2배(26억톤→52억톤) 증대되도록 하고 홍수기가 경과함에 따라 이를 높여 운영함으로써 댐의 홍수조절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하류하천의 홍수피해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실제보다 과소하게 발표되고 있는 댐의 홍수조절용량도 저수위 이상 계획홍수위 이하 공간을 최대홍수조절용량으로 발표함으로써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능력이 올바르게 평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회 임의 안내

- 홈페이지(www.keef.or.kr) 연합회 회고 참조
- 회원구분: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준회원
- 문의: 연합회사무국 T: (02)852-2291(대)